

##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의미와 방향

이 국 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오늘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는 '과도기'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2016-8년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여 탄핵에 이르게 하고, 직전 정부의 핵심인사들을 철저히 단죄했던 적폐청산과정은 말 그대로 검찰 권력의 정점이었다. 하지만 이 시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검찰조직과 정면으로 부딪쳤다. 이것은 해방공간에 만들어진 기괴한 형사사법구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그와 전혀 다른 원리가 지배하는 시대로 나아가려는 과도기적 선택인 셈이다.

앞으로 해방공간에서 만들어진 기괴한 형사사법구조를 극복하려면, 헌법적 차원에서 법관과 검사 같은 법률가 권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구성하며 통제할 것인지에 관한 분명한 대안을 제시해야만 한다. 그것을 위해 좀더 근원적인 수준에서 법률가는 사실 판단의 전문가가 아니라 법적 판단의 국지적 전문가이자 최종적인 분쟁 해결의 전문가일 뿐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법적 판단과 사실 판단이 혼용되어 있던 형사사법구조 하에서 대한민국 검사들은 사실 판단의 담지자인 수사관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종국에는 법적 판단의 전문가로서 법률가의 직업적 자아를 회복시켜야 하는 숙명에 놓여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이와 같은 근본적인 역설을 넘어서야 한다. 우선 수사와 같은 사실 판단의 전문가가 태부족이라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그 수요를 채우기 위한 체계적인 양성계획을 입안해야 한다. 그 결과가 축적되는 것에 발맞추어, 법률가는 기소와 공판과 판결이라는 법적 판단 및 최종적인 분쟁 해결의 영역으로 물러서도록 설득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